주간통일정세 2009-26(2009.06.22~06.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6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비핵·개방·3000은 흡수통일 목적(6/2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8일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망발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있고 그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다며 "흡수통일이 그 기초이고 종착점이라는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론은 극도의 반공화국 대결론"이라며 "통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통해서 이뤄지고 서로가 상대방의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화합도, 통일도 불가능하고 전쟁 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고 주장

北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사망(6/27, 조선중앙통신)

- 1998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가장 젊은 고위관료로 각광받았던 리광호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이 6월 26일 50세를 일기로 사망,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전 부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2기)인 리광호가 불치의 병(간암)으로 26일 50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부고를 발표했다고 보도
- 리 부장은 1997년 불과 38세의 나이에 북한의 과학기술을 책임진 국가과학원 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이미 30대 초반부터 과학원 부원장으로 활동해온 관료로, 김 위원장 체제를 대표하는 신진 관료,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둔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총괄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그는 특히 45세이던 2004년부터는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으로 전격 승진,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 그는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됐으며 11기에 이어 지난 3월 제12기 선거에서도 대의원 자리를 지킴.
- 60-70대 일색인 노동당 부장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인 그는 암기식에 매몰된 종전의 낡은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일련의 '교육혁명'을 과감하게 추진, 북한이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일반화하고, 암기보다 창의력 중시와 실

용교육을 중시, 그는 지난 2월 24~28일 노동당 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해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면담한 것을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앙통신이 리 부장의 직책과 관련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전 부장"이라고 지칭한 점으로 미뤄 그는 중국 방문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

北조평통, 무분별한 도발에 단호한 보복(6/25,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한 정부가 6.25전쟁일을 계기로 반북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무분별한 도발에는 단호한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는 남한이 최근 외국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전쟁기념관과 판문점 참관, 기념식, 위로연 등의 행사를 갖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24-25일 '6.25 상기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주장
- 담화는 6.25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겨냥해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를 몸서리치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김정일, 주체의 혈통계승으로 혁명승리(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연면수여, 위대한 그 업적 길이 전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령님(김일성)께서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라며 "이 주체의 혈통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 있기에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 신문은 "위대한 역사는 계승하면 빛난다"라며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은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 의해 창시되고 이룩된 불멸의 사상과 영도, 업적의 위대한 계승"이라고 강조
- 신문은 또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계승!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신성한 전통과 계승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위업, 김정일 동지의 위업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역사와 더불어 무궁토록 번영할 것"이라고 설명
- 함북 연사지구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이 항일투쟁을 벌인 곳으로 북한에서 선전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정비됐다고 북한 언론에 보도

김정일 1호통역원 이집트대사에 임명(6/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어통역을 전담하는 '1호 통역원'인 리혁철씨가 북한의 이집트주재 대사에 임명,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 "이집트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리혁철이 임명됐다"고 짤막하게 보도
- 리 대사는 지난 2000년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간 면담 등에서 김 위원장의 통역으로 등장했으며, 노동당 국제부의 지도원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그는 국제관계대학 재학 중이던 1978년 남미 가이아나 유학생으로 선발돼 1982년까지 이 나라의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고 귀국 후에는 국제관계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평양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원으로 활동
- 그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지만 뛰어난 영어실력을 인정받아 1991년 김 위원장의 영어 통역원으로 뽑혀 노동당 국제부로 자리를 옮겼음. 통역원들은 근무 연한, 나이 등에 따라 국제부 지도원, 과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평소 독자적인 대외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외국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 이들은 해외에 근무할 외교관 선발시 외국어 테스트를 담당

北, 제재에 "정신력 강화" 연일 강조(6/22, 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북한)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남김없이 과시"할 것을 주문
- 신문은 "미제의 강권과 지배주의 책동"으로 인해 "조국과 민족의 안전과 최고 이익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며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사상과 위업, 자기의 제도와 생활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결사 수호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때"이자 "필승의 신념과 낙관에 넘쳐 제국주의와 견결히 맞서 싸워나갈 때"라고 주장
- 앞서 20일자에서도 노동신문은 '조선 사람의 본때'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조선 사람들은 시련과 곤란은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지만 침략과 강권, 불의에는 용서를 모른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때"라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상대로 "일심단결의 본때"를 보일 것을 주장
- 신문은 지난 9일엔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현재의 북미 대결구도를 "반제투쟁의 의지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신력 강화를 통한 '대미 의지전'을 강조

北, 한미정상 '핵우산' 명문화 비난(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전쟁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비라'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이 명문화된 것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며 "그 이면에는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인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 집권자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도 남조선에 확장 억제력 제공을 언약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핵선제 공격론을 제창하는 미국이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난
-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북위협'론도 거론, "우리의 있지도 않은 '군사적 위협'을 걸고"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껏 할 수 있는 노력을 성의껏 다 기울여온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북위협'론을 부인

北, 군사분야 첨단기술 개발 통보(6/22, 마이니치 신문)

- 북한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핵, 미사일 실험에 앞서 지난 2월 하순에 전 당원에게 군사분야에서 "선진국만이 독점하는 최첨단 기술을 우리식으로 개발한다"고 통지하는 내부 문서를 배포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
- 신문은 당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자로 보낸 '전 당원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라는 제목의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 문서는 지난 4월 5일의 로켓 발사 실험 이전에 북한이 "위성을 로켓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담화(2월 24일)를 발표한 직후에 작성됐다. 문서는 모두에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드디어 강성대국의 입구에 발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에 따르면 문서는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밝히지 않은, 우리 인민도 본 적이 없는 실로 뛰어난 경제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우리 국가경제력의 핵심인 국방공업은 첨단기술 혁명의 입구에 우뚝 섰다"고 핵과 미사일 기술력 향상을 암시

나. 경제 관련

北접경 지린, 中 최대 마약 밀매시장 부상(6/28, 연합)

- 북한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이 중국 최대 마약 밀매시장으로 떠올랐음. 28일 중광망(中廣網)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린성 공안 당국에 검거된 마약 밀매 혐의자는 모두 367명이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이 6천139t에 이름. 지린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북한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주종, 함경남도 함

흥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은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회령 등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

- 얼음처럼 생겨 '아이스'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이미 북한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급속히 확산, 2006년 9월 회령에서 당 간부 등을 포함한 200여명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음. 북한에서 마약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국가에서 독점해오던 마약 제조기술이 민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서 제조되는 마약의 주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은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밀반입, 신장(新疆)지역에 기반을 둔 마약 밀매조직이 강화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지린성으로 근거지를 옮겨 농민들에게 종자를 제공, 대마를 재배하게 하고 있으며 이 대마에서 추출된 염산에페트린이 북한으로 건너가 마약으로 제조돼 재차 반입

北, 철갑상어 양식(6/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신창양어사업소에서 철갑상어의 양식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어사업에 들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특히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먹이가공방법을 개발하고 최신 양어기술을 도입해 철갑상어를 식용과 종자확보용으로 구분해 양식사업을 벌이고 있음.

긴장고조속 中보따리상 對北무역 활기(6/23, 연합)

-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실험 등 북한의 잇단 강경 조치로 북-중간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중국의 대북 보따리상들의 무역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23일 북한 접경지역인 옌볜(延邊)자치주 지안(集安)세관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물건을 휴대해 북한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대북 소규모 무역상들의 무역량 집계를 시작한 4월부터 2개월간 이들 무역상을 통한 북한 수출액은 31만4천달러로 이 기간 전체 수출 총액의 10.7%를 차지, 지안세관은 대북 보따리상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 지역 수출 감소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
- 퉁화(通化)시 하이관(海關)촌 통상구와 북한 함경북도 위원군를 자동차로 오가며 무역하는 대북 보따리상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은 대부분 저가의 생활용품들이다. 플라스틱 제품과 유리 제품이 각각 44.7%와 25.4%를 차지했으며 공책과 우산, 과일 등도 포함. 반면 알루미늄 창틀을 비롯한 고가 상품 거래량은 1천500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연합

북한, 소형무기와 탄약 520만 달러어치 수출(6/22,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

-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은 22일 공개한 '북한:경제적 수단과 정책 분석'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01년 이

후 7년간 소형 무기와 탄약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최소 525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의회조사국이 국제연합 무역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제 소형 무기를 수입해간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중남미의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최소 16개국에 이르며, 북한이 수출한 소형 무기와 탄약은 탄창 회전식 연발 권총인 리볼버에서 장총, 탄약, 폭탄, 수류탄 그리고 총검 등이라고 보고서는 밝힘.
-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2005년 80만 달러 어치의 북한제 총검류를 수입하고 나서 이듬해 2006년 306만 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해 이 기간 가장 많은 북한제 소형 무기를 수입한 나라로 나타났음.
-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해당 국가 간 소형 무기의 거래 규모가 "공식 통계에서 실제보다 줄여져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다. 군사 관련

◎ 북한, 깃대령 북동쪽 해상 항해금지(6/25, 연합)

-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스커드 미사일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직선거리 450여km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선포된 항해금지기간에 스커드 미사일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그러나 깃대령에서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신상리 앞 북동쪽 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음.

◎ 北, 원산 연해서 사격훈련 경고(6/22, 일본해상보안청)

- 북한이 원산시 인근 해안에서 사격훈련 실행을 경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힘. 해상보안청의 스즈키 신야 대변인은 북한이 이메일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 사이에 원산에서 110km 내에서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언, 해상보안청은 이미 6월 들어 두 차례 북한으로부터 동해 연안 선박 항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

라. 사회·문화 관련

백두산에 군민식물원 건설(6/28, 노동신문)

- 북한 백두산 지역에 군민식물원이 새로 건립됐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 허항령 기슭에 있는 이 식물원에는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소개

北, 내달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6/27,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수학 실력을 겨루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북한이 6번째로 참가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7월 14~21일 독일 베르멘에서 열리는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의 에바 바흐옌 공보담당관은 북한에서 대회에 참가할 학생 6명과 인솔자 등 8명이 이미 참가 신청을 마쳤다고 RFA에 밝힘. 올해 참가하는 북한 학생은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운송 군을 제외하고는 김정철, 이용현, 전호근 군 등 5명이 새로운 학생들로 구성

  * 북한은 1990년 중국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지금까지 5번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으며, 2008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97개국 가운데 7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음.

北 최고 '춤꾼' 홍정화 70세에 무용발표회(6/23, 조선중앙통신)

- 올해 나이 일흔의 북한 최고의 춤꾼 홍정화가 22일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무용발표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이번 발표회는 홍정화의 일흔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렸으며 그의 네번째 개인발표회이기도 했음.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정화는 15살 때 무용에 입문, 실력을 인정받아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만수대예술단에 들어갔으며 '행복의 실오리', '환희', '북춤', '목동과 처녀' 등 100여편의 무용작품에 출연했고 '나의 초소', '사관장과 전사들', '전차병과 처녀' 등을 창작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유엔, 대북 직접대화 책임자 선임 검토(6/27,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은 사무국 내에 북한 정부와의 직접대화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
- 유엔 사무총장실의 최성아 부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모리스 스트롱 전 대북 특사가 물러난 뒤 유엔 사무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가 중단돼 이를 복원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최 부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책임자는 '특사' 직책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엔 정치국에서 한 명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이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경우 인도주의적 문제 외에 정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북·미 관계

美, 달러위조 명분 새 대북 금융제재 가능(6/27, 미국의소리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美 대북제재 전담 범정부조직 구성(6/27, 연합)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로 구성된 전담 협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26일 전해짐. 이 조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가 이끌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측과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전언
-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범정부간 노력을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밝힘.

北억류 美 여기자들 건강 악화(6/27, 연합)

- 북한이 100일 넘게 억류 중인 미국 커런트 TV 소속 유나 리(Lee·36), 로라 링(Ling·32) 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계 링 기자의 남편인 이언 클레이튼(Clayton)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두 기자 석방 촉구 집회에서 링 기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나 리 기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
- 클레이튼은 6월 21일 북한에서 걸려온 링 기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링 기자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으나 "견딜만 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

美, 강남호 이외에도 다수의 北선박 주시(6/24, 미국방부 대변인)

- 미 국방부의 제프 모렐(Morrell)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박(강남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서 나오는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선박들에 대해 수년간 주시해왔다"며 "이 선박(강남호)은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이력이 있지만, 다른 많은 선박들에도 그런 이력들이 있다"고 언급
- 모렐 대변인은 강남호에 대한 검색 여부와 관련,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만이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답변, 그는 또 "이 선박에 대해 동맹국 및 지역 내 관련국가와 공동으로 검색할지,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할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

오바마,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6/2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를 1년 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

스웨덴대사, 北억류 美여기자 면담(6/24, 연합)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23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를 면담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가 오늘 (여)기자들과 만났다"면서 "면담은 이제 막, 불과 수시간 전에 이뤄졌다"고 전언

美, 항모타격단 北인근 배치(6/22, 터너라디오네트워크(TRN))

- 미국이 하와이로 향할지 모르는 북한의 예상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위시한 항모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고 미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터너라디오네트워크(TRN)가 22일 보도
- 조지 워싱턴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모로, 면적이 1만 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투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0~70대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美, 北미사일발사 만반 대비(6/22, CBS 방송)

-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께 하와이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정부와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이어 이러한 대비가 군사적인 경고냐는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또 "나는 가정의 상황들에 대해 추측하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주고 싶다"고 말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미국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

다. 북·중 관계

中외교부, 김정운 중국 방문 부인(6/27, 요미우리 신문)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3남 김정운의 중국 방문설에 대해 "김정운 씨가 한번도 중국에 온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

中, 北지원 계속, 美 제재 요청 거부(6/26, 연합)

-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석유와 식량 등 대북(對北) 물자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답변
- 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문에는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 인도주의적 원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 국가들이 이 1874호 결의에 찬성한 만큼 이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

中, 선박검색은 충분한 증거·이유 있어야(6/23, 연합)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관 결의(1874호)에 명시된 선박 검색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 그는 "선박 검색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유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의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

中, 북핵 5자협의에 반대 시사(6/23, 연합)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5자협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핵 '5자 협의' 지지(6/22,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정부가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제의한 '5자 협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현재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북핵 5자 협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성명은 이어 "러시아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

마. 북·일 관계

○ **日, 北 화물검사 불응 시 처벌 조항 마련(6/26,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와 여당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와 관련, 수출금지 물자를 적재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마련중인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또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실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실시하고 자위대는 정보수집 및 발견된 화물의 감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 정부는 내달 초순 법안을 확정,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소개
- 화물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것임.

○ **아소,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 방침(6/23, NHK방송)**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오는 28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23일 보도
- 아소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도발적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해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북한산 담배, '백산' 내달부터 시판(6/25, 연합)

- 7월부터 북한 업체가 생산한 담배가 시판될 예정, ㈜엠투씨백산은 북한 업체가 평양 공장에서 생산한 담배인 '백산' 17만5천갑을 인천항을 통해 들여와 7월 6일께부터 시중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힘.
- KT&G가 2000년에 북측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평양에서 '한마음', '잎스' 등을 생산해 들여온 적이 있지만, 북한 회사가 만든 담배가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음. 국내 수입사인 엠투씨백산은 중국과 북한이 공동 설립한 담배제조업체인 평양백산합영회사와 8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번에 첫 물량을 들여오게 됐음.

北, 유씨문제 '인차' 해결(6/23, 연합)

- 북한은 19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3차 남북 접촉에서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에 대해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23일 밝힘.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서 '인차'의 뜻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며 "인차가 '이내(곧)'의 뜻이라면 조만간 유씨 문제가 풀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라는 뜻이라면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美 대북제재TF팀장 골드버그 특사(6/27)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 포스를 이끌 특사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를 임명해 그의 경력과 임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필립 골드버그는 작년 9월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피인물로 규정해 추방명령을 내림에 따라 워싱턴으로 귀환하기까지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던 중견 외교관.
-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대사가 보수우파 야권세력을 지원하면서 볼리비아의 분열과 정부 전복음모를 부추기고 있다며 추방령을 내렸고, 미국 정부도 구스타보 구스만 워싱턴 주재 볼리비아 대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음.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이끌 골드버그 특사의 주요 임무는 우선 대북제재 문제가 미 행정부내에서 국무부와 재무 등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조정을 통해 유기적인 대북제재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임.
- 특히 부시 행정부 말기에 노출됐던 국무부와 재무부간 관할권싸움 등 부처간 영역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태스크포스의 몫중 하나.
- 골드버그 특사에게 있어 최대숙제는 역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분석하고 있음.

"美, 달러위조 명분 새 대북 금융제재 가능"(6/27)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했음.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를 작성한 딕 낸토 박사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달러화 위조는 매우 구체적인 범법행위이고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북 금융제재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달러화 위조 외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대북 정책 및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독자적 행동을 취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음.
- 낸토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꼭 BDA식의 동일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기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금융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로서는 여러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음.

"유엔, 대북 직접대화 책임자 선임 검토"<VOA>(6/27)

- 유엔은 사무국 내에 북한 정부와의 직접대화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음. 유엔 사무총장실의 최성아 부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모리스 스트롱 전 대북 특사가 물러난 뒤 유엔 사무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가 중단돼 이를 복원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스트롱 전 특사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시절 대북특사로 활동하다 유엔의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 연루 의혹으로 2005년 7월 물러났고 이후 유엔의 대북 고위급 대화 채널은 중단됐음. 최 부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책임자는 '특사' 직책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 정치국에서 한 명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이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경우 인도주의적 문제 외에 정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美 대북제재 전담 범정부조직 구성(6/27)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로 구성된 전담 협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26일 전해졌음. 이 조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가 이끌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측과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전했음.
-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범정부간 노력을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밝혔음. 크롤리 부대변인은 "그가 범정부 조직을 이끌고 조만간 여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미 대표단의 구체적인 방문국 등은 전하지 않았으나 한·중·일 등이 포함되는 아시아국 순방일 것으로 예상됨.

G8, 北 핵실험·로켓 발사 규탄(6/26)

-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은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음. 이날 공개된 G8 외무장관 회담 공동성명 초안에서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하고, 지난 4월 5일에는 로켓을 발사해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 데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음.

"北 핵전쟁 위협은 정치적 수사"<러 전문가>(6/26)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세계경제연구소 알렉산드르 피카예프 군축 분과장은 26일 "북한의 핵전쟁 위협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는 이날 러시아 관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노동당의 선전 선동책이며 외교적,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함.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백악관 장미원에서의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는 결국 핵 억제력 보유의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유사시' 우리의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피카예프 과장은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일 것"이라면서 "공식적 평화조약이 없는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위험 상황을 고조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강조함. 그러나 그는 "북한의 강경 발언이 '슬픈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함. 또 최근 제기된 '5자 협의'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5자 협의'는 당사국들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당사국들의 일치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5자 협의는 북한에 자신들이 고립돼 있으며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함.

"北, 美·日 무력사용 어려움알고 합의위반"(6/26)

-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원장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25일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최근 도발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힘. 나이 교수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최 청문회에서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과 국경지대 혼란을 우려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서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그는 한마디로 최근 북한의 행위는 "약삭빠르고 기만적"이라고 평가함.

- 버락 오바마 정부의 초대 주일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던 나이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내년 50주년을 맞는 미·일 동맹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일본 영공 위로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일본이 핵억지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오래된 결정을 번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일본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을 정도라는 것임. 나이 교수는 "일본내 여론은 세계 전체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희망과 미국이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핵군사력을 감축하면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돼 일본이 결과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국방전문가들의 우려 사이에서 분열돼 있다"고 말함.
- 나이 교수는 "확장 억지력이 핵무기 숫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확장 억지력은 그보다는 핵능력과 신뢰성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해 일부 일본 국방전문가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점을 강조함. 미국의 최상의 확장억지력 보장은 일본에 5만명에 가까운 미군 주둔 지역탄도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이며 이와 동시에 미·일동맹관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對) 아시아 관계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일본 건너뛰기(Japan passing)'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나이 교수는 설명함.
- 나이 교수는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예산 증가도 미·일동맹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함. 이와 함께 나이 교수는 현재의 일본 정치상황과 관련, "국내 정치 문제로 불확실성과 재편을 겪을 것"이라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장기집권해온 자민당이 교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임.

"北, BDA식 금융제재에 이미 학습효과"(6/25)

- 북한의 2차 실험 뒤 미국이 구상중인 대북 금융제재는 지난 2005년 미국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통한 금융제재의 학습효과 때문에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가 25일 전망함. 한반도 전문가인 해거드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의 정치경제: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기자와 만나 북한은 미국의 제재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레바논이나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과의 금융무역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비켜가려 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미국에서는 BDA 제재가 북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 다시 같은 형태의 금융제재를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도 이미 학습효과가 있어 마카오와 같이 제재에 취약한 은행 한 곳에 자금을 몰아 넣어 두는 실수를 두번 다시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도 무기금수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의 대

외교역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해거드 교수는 주장하고 "북한은 이같은 제재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함.

- 그는 중국이 이번 유엔 제재에 적극 동참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결의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은 제재수위를 높이려 했지만 중국은 낮추려함으로써 결국 무기금수 부분에 국한됐다"고 상기시킴. 이날 주제발표에서 해거드 교수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의 대중 교역에 별 영향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함. 북한 경제가 10년전에 비하면 많이 개방되긴 했으나 "개방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뤄졌고 시리아, 이란 등 중동지역과의 교역도 한국 코트라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함. 그는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의 교역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수년간 북한에 살았다는 한 중국 기자는 "1차 핵실험 뒤 제재에도 북·중간 무역규모가 별로 안 줄어든 이유는 1718호가 사치품에 한해 제재를 가한 반면 북·중무역은 일상생활 소비재들로 고급 사치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해거드 교수는 "유엔 제재가 왜 효과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한가지 설명"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한가지 다른 해석은 북한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핵실험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함.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제재가 전임 부시 행정부와 비슷해 우려된다"며 "지금은 북한을 어떻게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지의 문제가 아닌 채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간 모든 채널이 닫혀 있고 북한의 뉴욕 유엔대표부 채널도 닫혀 있다"고 주장함. 그는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문제를 활용, 대북 특사 파견으로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북한이 6자회담이 끝났다고 말해도 6자회담을 만든 우리는 끝이라고 말해선 안된다"고 덧붙임.

中 '대북지원 중단 없다' 시사(6/25)

- 중국 정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시사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된 조치들이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행위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함. 이 발언은 중국이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잠가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자체 제재를 시행하지도, 시행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됨.

- 친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유엔의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경제·무역교류·인도주의적 원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1874호는 금융 제재와 관련,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친 대변인은 "한국전쟁 발발 59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노력해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중국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서 하루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다(氷凍三尺,非一日之寒)'란 뜻의 성어가 있다고 소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서로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위성락 "5자협의는 대화 위한 제안"(6/25)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5자협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대화를 위한 '오퍼'(제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함. 위 본부장은 이날 러시아에서 귀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자협의가 압박과 설득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5자협의는)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북한이 5자협의 자체를 압박으로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대화를 위한 의견 사전 조율이라고 하면 반드시 압박의 장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협상을 위한 나머지 나라 간 의견조율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 위 본부장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5자협의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함. 그는 또 "5자협의는 6자회담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고 5자 간 회동을 통해 6자 과정으로 가기 위한 사전 협의"라며 "북한을 협상 과정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나라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안을 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덧붙임.
- 위 본부장은 '5자협의를 위한 장소나 시기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중국이 5자협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좀 기다려 달라"고 답하고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 "지난번에 다녀왔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중국의 대북 영향력 과대평가 말아야"(6/25)

- 북한이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행위에 나서면서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돼 왔고 현재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게하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우드로윌슨국제센터 북한 국제문서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제임스 퍼슨 씨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과 중국의 60년 동맹관계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심오한 불신의 감정이 있었고 중국이 경제발전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잃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북한 관련 국제문서 분석을 통해 북-중 관계를 연구해 온 퍼슨씨는 "중국이 북한의 정치적·외교적 보호자 역할을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필수불가결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북-중 관계를 들여다볼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영향력이나 수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려 노력해온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198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발표 때 등을 비롯해 북한의 주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을 했었고 북한은 이를 중국이 자신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하며 양국 간의 위계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은 전적으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함.
- 퍼슨씨는 "중국 지도부는 이를 알아차리고 이제 더는 북한의 내부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북한에 대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평양의 중국 대사관은 현재와 미래의 북한을 이끌 인사들을 초청해 주단위로 파티를 열고 있고 중국은 성공적으로 북한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함.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오래도록 막으려했던 것이고 북한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이 최근 갈수록 군사적인 모험에 나서는 것은 승계작업 준비 때문이라기보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퍼슨씨는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에너지·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2012년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함.

○ "중국의 北난민·주한미군 우려해소 필요"(6/25)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 및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과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은 2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기고한 '새로운 대북전략'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함.
- 이 기고문에 따르면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핵폐기를 위한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상의 우방이자 석유의 주공급원으로, 많은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는 것.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붕괴냐 아니면 북핵폐기냐를 양자택일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정치·경제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이같은 압력을 가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함.
- 특히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더 우려하며, 특히 미국의 우방이나 주한미군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미국의 목적은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정책변경이란 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설득시키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대규모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임.
- 북한난민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상당수 난민들을 담당해야할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어 통일된 한반도에 난민들이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토록 하는 등 우방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재정적 비용을 국제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함.
- 솔라즈 전 의원 등은 또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통일한국이 수립되더라도 주한미군은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시적 이동을 제외하고는 38선 이북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거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중국에 대해 21세의 초강대국으로서 북한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韓-러 '5자 협의' 필요성 공감"(6/24)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5자 협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함.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오전(현지시각) 모스크바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복원을 위한 5자 협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5자 협의 등 어떤 포맷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함.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왜 6자회담의 복귀가 필요한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동원돼야 하며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며 "당사국 간의 긴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어떤 형태의 협의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며 "러시아는 5자 협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5자 협의 의제 또한 6자회담 복귀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두 대표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5자 협의'에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고 배석한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이 전함.
- 특히 위 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한국 특파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행보가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5자 협의'에 신속하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표시한 만큼 중국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아닌 제재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하고자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회동이 필요하다며 5자 협의를 공식적으로 제의했고, 러시아는 지난 22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 그러나 중국은 아직 '5자 협의'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위 본부장은 내달 21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자 협의'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 소속 5개국이 ARF에 모이기는 하지만 '5자 협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참여도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中전문가 "韓·美, 北위협 공동대응에 초점"(6/24)

-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당분간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전망함.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의 쑨루(孫茹) 연구원은 24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향후 일정 기간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실제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도 예년에 비해 확대됐고 양국의 군함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함.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면서 이는 양국이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쑨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약화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평가함.
- 이어 "미국 입장에서도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핵비확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 등 당면한 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더욱 전면적인 전략관계를 한국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함. 그는 한·미간 전략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함.
- 쑨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2007년 20여명의 한국인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되는 충격을 겪었던 한국으로서는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함.

韓-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6/24)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감.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모스크바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최근 북한 내 동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함.
- 두 대표가 지난 3월 서울에서 한차례 회동한 바 있지만 위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수석대표 임명 이후 이번이 처음임. 양국 6자 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874호 이행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특히 한국이 6자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 개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

로 알려짐.

- 한국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아닌 제재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하고자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회동이 필요하다며 5자 협의를 공식적으로 제의했고, 러시아는 지난 22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위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제사회가 뜻을 모은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 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때문에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우려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것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의미다"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회담은 북한이 핵실험을 더는 수행하지 않겠다고 할 때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함.

中 "선박검색은 충분한 증거·이유 있어야"(6/23)

- 중국 정부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문제와 관련,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관 결의(1874호)에 명시된 선박 검색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선박 검색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유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의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함.
-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호는 현재 중국 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인공위성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추적, 감시중인 것으로 전해짐. 친 대변인은 "북한 선박에 대한 보도를 접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선박의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유관 당사국에 호소한다"고 덧붙임.
- 한편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두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함.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함이며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만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함.

中, 북핵 5자협의에 반대 시사(6/23)

- 중국은 23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의 회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5자협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친 대변인의 이 발언은 5자협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친 대변인은 이어 "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은 다른 각 당사국과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4강대사 '북핵해법' 발언록>(6/23)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주한 대사를 초청, 북핵 문제의 전망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이날 토론회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함. 다음은 주요 발언록 요지.
-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 한미 공동 선언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안되며,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국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했으며, 핵을 가진 북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역적인 협력이 제일 중요시 된다. 유엔과 협력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의지를 보여서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협력한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방문해 북핵, 미사일이 전 세계에 위협이고, 동북아의 안정을 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비핵화를 실현하고 다시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엄격하게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실행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이런 행위를 고집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겠다.
-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를 해결하고 싶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원칙은 북한과 심각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다. 6자회담이라는 포맷이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 (5자회담의 사전 전제조건과 북한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해법에 대해) 어떻게 하면 6자회담 틀 안에서 끌어나갈지, 미국은 모든 파트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6자회담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 포맷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은 6자 회담 이뤄지지 않아서 어떤 전제조건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자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호소를 하려고 하고 그에 따른 결과 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 =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위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해 많은 불안을 느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고, 전 세계의 일치된 목소리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일본은 독자적 조치로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금지하고 재입국 금지를 이미 실행에 옮겼다.
-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량살상무기의 자금 흐름을 끊으면서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구체적 결실을 얻기 위해 6자회담의 완전한 실시를 목표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시점에서 5자회담의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 틀 안에서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간 협의가 실시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도 이웃인 일본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수비형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이 있는가) 일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국내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핵을 갖지 않을 생각이고, NPT에 따라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
- ▲청융화 대사 = 중국 정부와 외교부는 북핵 실험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해서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발표했다. 동북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해이며, 우리는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협의에 참여해 왔다. 1874호 결의에 중국도 찬성했지만 제재가 안보리 결의의 목적은 아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북한에 줬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모두 원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21세기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과 평화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관련 국가의) 관심사를 조율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일임에도 중국이 짐을 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관련 각국이 함께 노력하면 평화 협상이 성과를 거둘 것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움에 대처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악순환을 막고 정세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경색 국면을 타파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은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5자회담에 대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한국 비롯한 각국과 협력해 중지와 지혜를 모을 것이다.

- ▲글레브 이바셴초프 대사 = 북핵실험 장소가 러시아 국경에서 180㎞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러시아에도 직접적인 우려 상황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추가적인 제재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
- 북한 일반 주민의 경제적인 필요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선례를 남기거나 폭넓은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대화의 문이 닫혀서도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우려에 처할 것이며, 지역 안보의 저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이 책임 있는 접근법을 통해 지역 안정의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가능하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 모든 당사국은 비핵화 경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계속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5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 6자회담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피해야 한다. 5자회담의 제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아소,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 방침(6/23)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오는 28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23일 보도함. 아소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도발적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해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함. 또한 아소 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기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 긴밀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NHK는 밝힘.

러시아 "북핵 '5자 협의' 지지"(6/22)

- 러시아 정부가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제의한 '5자 협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현재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북핵 5자 협의를 지지한다"고 밝힘. 성명은 이어 "러시아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브라운백 "北, 돈세탁 우려국 지정하라"(6/27)

- 샘 브라운백 미국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26일 북한을 돈세탁 주요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 재무부에 요구했음. 미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브라운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
- 브라운백 의원은 "돈세탁과 위조 화폐, 마약 거래 및 대규모 보험사기가 북한 정권의 재정 수단"이라면서 "북한의 불법적 수입원을 차단하고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은 애국법에 따라 돈세탁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국가를 재무부가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국가나 단체는 미국 금융체제의 접근이 완전 차단됨. 현재 미얀마와 나우루가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음.

美 "대북제재 불구 인도적 지원엔 열린 입장"(6/26)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둠.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많은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함.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원칙적 입장에서라도 미국의 대북 지원가능성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임.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음. 그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검증 방법을 묻는 질문에 "그들(북한)이 많은 NGO(비정부기구)들을 (북한에서) 내쫓은 뒤 매우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 억류 100일을 넘긴 두 명의 미국 여기자 문제와 관련, "그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그는 이들을 석방을 위해 "여러 다른 채널을 통

해 일하고 있다"면서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 문제에 매우 관여하고 있다"고 말함.

오바마,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6/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를 1년 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비상지휘권을 행사해 26일로 만료되는 북한과의 자산거래 제한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함.

美의원, 北 핵미사일 발사시 선제공격 시사<VOA>(6/25)

- 트렌트 프랭크스(공화)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은 발사 초기단계 이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미 의회 '미사일방어 토론모임(MDC)'의 공동의장인 프랭크스 의원은 23일 열린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로 이를 격추시켜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미사일 기술을 얻기 원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판매 선전이 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격추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프랭크스 의원은 말함. 프랭크스 의원의 '발사 초기단계 이전 파괴' 언급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고 방송은 말함.

스웨덴대사, 北억류 美여기자 면담(6/24)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23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를 면담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가 오늘 (여)기자들과 만났다"면서 "면담은 이제 막, 불과 수시간 전에 이뤄졌다"고 전함. 그는 면담 내용과 구체적 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함.
- 북한이 이들 여기자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3주일여만에 처음임.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 여기자에 대한 영사접근권을 추구해 옴. 켈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 이들 두 명의 기자를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힘.

-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접촉 경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국무장관이 말했다"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피함. 그는 북한이 스웨덴 대사의 요구에 면담을 항상 허락한 것은 아니라면서 북측이 면담을 허용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함.

"강남호 승선 불필요한 위험 초래"<美전문가>(6/23)

-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금수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의 강남호를 강제 승선검색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덴마크 연구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전날 TV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면 강남호에 대한 강제 승선검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덴마크 연구원은 "강남호에 강제 승선하는 것은 우리 선원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뿐"이라며 "이는 피할 수도 있는 긴장고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격이 된다"고 지적함. 그는 "현재 미 군당국이 강남호를 추적하는 이유는 선적된 화물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라기 보다는 과거 의심스러운 물자를 수송했다는 의혹 때문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맞춰 강제 승선검색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강남호가 아닌 다른 북한의 선박이 핵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민감한 물자를 실어나르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라면, 북한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의 선박에 대해 미 군당국이 강제 승선검색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덴마크 연구원은 강남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밝힘.
- 덴마크 연구원은 최근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의 CNAS 보고서를 공동집필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北강남호 추적, 대북제재 첫 시험대"<NYT>(6/22)

- 미국 해군 함정의 북한 선박 '강남'호 추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얼마나 이행할지 가늠케 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2일 분석함.

- 이 신문은 강남호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최초의 검색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함.
- 강남호는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돼 지난 17일 출항 이후 줄곧 미 해군의 추적을 받고 있음. 강남호의 도착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선박이 미얀마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그러나 미얀마 역시 국제적 무기 제재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남호의 해상검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착지에서의 결의 이행도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 중·북 관계

北접경 지린, 中 최대 마약 밀매시장 부상(6/28)

- 북한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이 중국 최대 마약 밀매시장으로 떠올랐음. 28일 중광망(中廣網)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린성 공안 당국에 검거된 마약 밀매 혐의자는 모두 367명으로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이 6천139t에 이름.
- 올 상반기 지린성에서 압수된 마약은 중국 내 성(省)과 시(市)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임.
- 지린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북한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은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회령 등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 얼음처럼 생겨 '아이스'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이미 북한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6년 9월 회령에서 당 간부 등을 포함한 200여명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음.
- 북한에서 마약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국가에서 독점해오던 마약 제조기술이 민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에서 제조되는 마약의 주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은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밀반입되고 있음.
- 신장(新疆)지역에 기반을 둔 마약 밀매조직이 강화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지린성으로 근거지를 옮겨 농민들에게 종자를 제공, 대마를 재배하게 하고 있으며 이 대마에서 추출된 염산에페트린이 북한으로 건너가 마약으로 제조돼 재차 반입되고 있음.
- 이달 초 지린성에서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인 53명의 마약 밀매 조직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지린에서 재배한 대마 등을 이용해 제조된 마약을 충칭(重慶)과 간수(甘肅) 등을 거쳐 신장으로 가져간 뒤 해외 마약 조직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 올 상반기 중국 공안에 검거된 범죄자 12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명이 마약 밀매사범들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5명에 비해 배가까이 늘어난 것임.

"中 대북무역, 北 방패막이 역할"<WP>(6/28)

- 중국의 대북 무역이 '북한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음. 신문은 북한이 3년 전 핵실험을 실시한 뒤 오히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거래가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음. 신문은 유엔 제재 확대와 남북간 무역이 쇠퇴하면서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지난해 41% 증가했으며, 북한의 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고 소개했음.
-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들의 주요 바이어가 중국임을 지적하면서 중국 업자들로부터 거둔 광물수출 대금이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 점점 더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 신문은 현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가면서 대북제재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음.
-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이런 거래가 증가하는 한 제재와 외교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도 "중국이 평소처럼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한 북한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 철강석, 아연, 납, 마그네사이트 등을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음. 신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큰 적은 없었다면서 무역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도 크게 늘어 2004년 이후 거의 6배나 증가했다고 전했음.
- 또 북한 내 중국 경제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역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대북 무역규모가 25% 감소했다고 전했음.

中 외교부 차관 "김정운 한번도 온 적 없어"(6/27)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3남 김정운의 중국 방문설에 대해 "김정운 씨가 한번도 중국에 온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음.
- 우 부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자민당 전 간사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정운이 방중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했다는 일부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가토 전 간사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우 부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표시했음.

○ "中, 대북제재보다 북중관계 유지 결론"<VOA>(6/26)

- 중국이 미국의 거듭되는 대북 제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대북 제재보다 기존의 북중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음.
- 팔 연구원은 "베이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북중 관계가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적어도 상당기간 중국의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근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북중 관계의 큰 틀은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음.

○ "북한과 중국 간 전통적 유대관계 냉각"(6/23)

- 최근의 핵 사태와 관련, 상하이 푸단대의 북한 전문가인 카이지안 교수는 최근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안정의 균형과 핵 비확산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 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함. 중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 여전히 각종 식량과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평양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빚진 게 아니고 중국이 북한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북한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중국 사이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임.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관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을 보호해왔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日여당 "北선박 화물검사 자위대도 실시"(6/23)

-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위한 일본의 특별조치법과 관련, 여당인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함. 일본 정부는 프로젝트팀의 논의를 토대로 내달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일본 내 법 정비 차원에서 현재 여권 내에서 마련 중임.
- 프로젝트팀이 구상 중인 법안은 영해, 공해 모두에서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모두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북한을 출입한 선박에 대한 선내 진입 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중심이 돼서 실시하고 해상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각국 군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알려짐. 이는 자위

대가 화물검사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짐.

마. 기타

◎ 유럽의회 내 知北派 사실상 와해(6/28)

- 지난 7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북파(知北派)'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 향후 유럽의회와 북한 사이의 의사 소통이 경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북한이 대외 강경노선을 펴는 가운데 중립적 위치에 있는 유럽의회와의 의사 소통마저 경색될 경우 고립이 심화할 가능성이 큼.
- 28일 현재 제7기 유럽의회 선거 개표가 완료된 21개국의 당선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유럽의회 내 대표적 지북파 의원인 휴버트 피어커(오스트리아) 한반도관계대표단(이하 대표단) 단장이 낙선했음.
- 지난 2004년 9월 출범한 대표단은 정례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방문할 뿐 아니라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브뤼셀 또는 스트라스부르의 의사당으로 초청, 의견을 교환해 소속 의원들의 대(對) 북한 지식과 정보가 상당한 수준임.
- 피어커 의원도 대표단 단장으로서 지금까지 북한을 3차례 다녀오고 EU 집행위원회와 한반도 주변국 주재 외교 소식통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청취, 유럽의회 내 대표적 '북한통'으로 손꼽혔음. 지북파를 넘어 '친북파' 인사로 불렸던 글린 포드 의원도 재선에 실패했음.
- 포드 의원은 영국 노동당 소속으로 나섰다가 보수당 '열풍'에 고배를 마셨는데 '벼랑 끝에 선 북한'(North Korea on the Brink)이라는 책을 펴내고 유럽의회에서 북한 미술품 전시를 성사시키는 등 북한 관련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음.
- 대표단에서 역시 지북파 의원으로 꼽혔던 이스트반 센트-이바니(헝가리) 수석 부단장과 게오르크 야르첨보브스키(독일) 의원도 낙선했음.
- 대표단 소속은 아니지만, 각종 회의와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던 야누시 오니시키에비치(폴란드) 의원도 재선에 실패했음.
- 이로써 루이스 그레크(몰타) 대표단 제2부단장과 대표단 소속은 아니면서도 북한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리보르 로우체크(체코) 의원 정도가 내달 14일 개원하는 제7기 유럽의회에서 지북파의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싱가포르, 강남호 기항 부인(6/25)

- 미국 구축함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강남호는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로 향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미얀마와 싱가포르

당국은 25일 강남호가 자국항에 기항할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함. 또 미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강남호를 추적 중이라고만 밝히고, 강남호의 현재 위치나 해군에 언제 강남호 검색 명령을 하달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미얀마 정부의 통제를 받는 현지 언론들은 이날 미사일 또는 관련 부품들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호가 미얀마에 기항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함.

- 현지 신문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New Light of Myanmar)는 "외국뉴스통신사들이 강남호의 미얀마 기항 사실을 퍼뜨리고 있으나 미얀마 관계당국은 강남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대신 또 다른 북한 선박인 두만강호가 27일께 인도 콜카타로부터 도착해 8천t의 쌀을 선적할 예정이라고 전함.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국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미얀마와 북한은 지난 2007년 24년 만에 관계를 복원함.
- 또한 싱가포르 당국도 이날 강남호의 자국항 기항 보도에 대해 어떤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함. 싱가포르 해운항만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남호의 기항 여부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힘. 앞서 싱가포르 외무부는 지난주 만약 강남호가 유엔 제재하의 금수물자를 운반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싱가포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함.

"北 핵실험 때 이란 대표단 참관"(6/25)

-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5월 하순 이란 대표단 7명이 방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한반도 정세에 밝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또 6월 초 북한 경비정이 한국 영해를 일시 침범했을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 당국자가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이 전함. 신문은 이란 대표단이 북한의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에도 북한을 방문했다며 일련의 북한 방문은 북한과 이란이 군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함.
-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대표단은 약 1주일간 북한에 머물렀고 지난달 25일 핵실험도 시찰함. 혁명수비대 당국자는 한국과의 군사경계선 및 동해 쪽에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도 방문함. 이들은 또 북한 경비정이 지난 4일 동해상의 군사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한국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에도 그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케이는 전함.

<러 학자들 "한국전쟁은 北의 남침">(6/23)

- 구소련 당시부터 한국전쟁을 남한에 의한 북침 또는 남북간의 내전으로 일관되게 기술했던 러시아 학계에서 최근 한국전쟁을 북한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저서가 잇따라 출간됨.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톨쿠노프, 데니소프, 리 등 세 교수가 공동 저술해 지난해

출간한 '한반도'라는 책에는 "1950년 6월15일 슈트코프 북한 주재 소련대사가 북한정권은 소련의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계획을 수립했고 6월25일 새벽 대규모 군사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크렘린에 보고했다"고 기술함.

- 당시 슈트코프는 "전쟁은 옹진반도를 비롯해 서해안 지역을 먼저 침공해 서울을 포위한 다음 남한의 주력군을 패퇴시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편 동부지역은 전략상으로 중요한 지역만 점령하면서 내려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보고함. 또 북한 김일성이 그해 4~5월 소련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 스탈린과 비밀회담을 통해 전쟁을 결정했고, 스탈린은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내 북한의 전쟁계획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임.
- 당시 스탈린의 가명인 '필리포프'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전문에는 "한반도의 정세가 변경됨에 따라 북한 지도자의 제안(해방전쟁)에 동의했다. 중국도 북한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이어 "만약 중국의 동의가 없을 경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김일성 등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김일성의 중국 방문 계획을 전하고 있음. 이 전문은 그해 5월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베이징을 방문, 마오쩌둥과 회담할 즈음 전달됐으며 마오쩌둥은 김일성 등과의 회담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 그 누구도 공공연히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기술함.
- 이와 함께 한국학 전공자인 포포프, 라브레네프, 바그다노프 등이 지난 2005년 출간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인 한국'이라는 책에서는 "당시 소련의 군사고문단은 7월에 전쟁할 것을 주문했으나 김일성은 6월 침공을 고집했다"는 비화를 소개함. 이 책은 6월 전쟁의 주된 이유를 침공계획이 외부로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7월은 장마철이어서 전쟁에 부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 또한 당시 평양주재 소련대사 슈트코프가 그해 5월27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도 공개함. 전문에는 "김일성이 전쟁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통보했고 사단급 등 군부대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6월말 군사행동을 감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또 당시 남한에 있던 UN측 관계자가 6월25일 새벽 4시 UN본부로 보낸 문서도 소개했는데 "북한이 침공했다. 우발적이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침공같다"며 "김일성은 5월12일 평양주재 북한대사(슈트코프)에게 남한침공계획을 보고했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소련 군사전문가들도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바닌 바실리예비치가 저술한 '한국전쟁과 유엔'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은 북한정권이 일으킨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조약위반"이라고 규정함. 이런 현상에 대해 톨스토쿨라코프 이고리 극동국립대학교 교수(한국학)는 "구소련 당시부터 한국전쟁

은 남한에 의한 북침설이 주류를 이뤘으나 2000년 이후부터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정정되는 추세"라고 학계 분위기를 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韓日, 북핵불용-5자협의 원칙합의(종합)(6/28)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8일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5자협의'도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 총리실에서 1시간 40분간 아소 일본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졌음.
- 두 정상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핵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 북한의 잇단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고, 5국이 6자회담이란 틀 안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 아소 총리는 "5자회의에 대해서도 6자회의를 진전시킨다는 형태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점에서 관계국간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공조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또 재일동포 사회의 역사적 경위 등을 감안해 이들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아소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으며,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도 당부했음.
- 두 정상은 아울러 원자력, 과학기술, 우주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FTA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면서 "서로 상대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뜻밖에 빠른 시간내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대학생 교류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9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음.
- 두 정상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대(對)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공동지원, 대테러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가 만난 것은 이번이 모두 8번째로,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석달만임.
- 이번 방일은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양국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는 '셔틀외교' 차원에서 이뤄졌음.
-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외에 재일민단 간부 초청 오찬간담회,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한.일 경제인 초청간담회, 아소 총리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한 뒤 밤 늦게 귀국함.

○ <日 지식인 7명 한국신문에 북한인권 광고>(6/25)

-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면 의견광고를 25일 자 일부 한국 신문에 게재함. 와세다(早稻田)대 대학원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교수 등 학자,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의견광고 7인회'라는 명의의 이 광고는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과 납치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척시키고 싶다"고 밝힘. 이어 광고는 "한일 양 국민은 서로 손을 잡고 북한을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함.
- 광고는 1977년 13세 나이로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와 이듬해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의 가족사진도 함께 싣고 "납치 피해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해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재회시켜야 한다"고 함. 광고비는 모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앞서 뉴욕타임스에도 '북한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탄압 해결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음.
- 7인회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의 평양 방문 직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활동을 시작함. 이들은 이번 의견광고에서는 자신들을 '북한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조속한 구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그룹'이라고 밝힘. 이들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 환기를 위해 다음에는 르몽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 유력지에 의견광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일 국방차관회담..교류협력 확대키로(6/23)

- 한국과 일본은 23일 국방차관 회담을 열어 양국 해군간 공동수색구조훈련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장수만 국방차관과 마스다 코헤이(增田好平)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0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국방차관 회담을 열어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국방교류 의향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같이 합의함.
- 한·일 국방교류 의향서는 두 나라간 국방교류 범위를 ▲국방 장·차관, 합참의장, 각 군총장 등 고위급과 실무급 인사 교류 ▲교육·연구기관 교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공동훈련 정례화 ▲양측 부대간 교류와 훈련 참관, 함정과 항공기 상호방문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해외 긴급구호활동과 관련한 협력으로 명시한 바 있음.
- 또 두 차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두 차관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자국의 활동을 각각 소개한 뒤 해적 퇴치를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국방부는 "마스다 차관은 지난 6월1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일본의 해적대처법은 7월 하순에 발효되며 일본과 관련이 없는 외국선박도 호송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함.

나. 미·중 관계

美당국자 "中, 대북제재 철저이행 다짐"(6/27)

-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26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언급을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음.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그들(중국)은 결의에 들어있는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깊이 약속한다는 점을 꽤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이제 진짜 시험은 이행"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중국)의 언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하지만 중국의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는 전하지 않았음.
- 그는 또 미국은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달리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전략을 변화시키토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수단들을 가진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를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美·中 국방협의회..북핵문제 논의(6/23)

- 미국과 중국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0차 연례 국방협의회를 열어 북핵 문제와 양국간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함.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을 대표로 한 미국 국방부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만나 양국 군사관계, 대만 문제, 북핵 등 국제·지역안보 문제 및 공동 관심사를 논의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미 국방 분야 대표단이 국방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음을 시사함. 그는 "중국은 이 회담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음.
-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자제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미·중 국방협의회는 군사분야에서 양국간에 최고위급 회의이며 작년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판매 문제 때문에 연기된 바 있음. 미국 국방부 대표단은 24일에도 중국과 추가 회담을 벌인 뒤 25일 일본, 26일 한국을 잇따라 방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대북 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다. 미·러 관계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상 시작(6/23)

- 오는 12월 5일 시한이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3차 협상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됨. 한 러시아 외교관은 "협상이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에 러시아 공관에서 시작됐다"고 전함.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협상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국은 3차 협상까지 마치고 1차 초안을 만든 다음 그 결과를 다음 달 미-러 정상회담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 미·러 양국은 2002년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합의함.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SORT가 정한 것보다 핵무기를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

아 대통령은 20일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략무기를 START-1에 비해 몇 배 더 감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탄두 수는 러시아와 미국이 2002년 서명한 SORT가 정한 것보다 더 감축돼야 한다고 말함.

라. 중·일 관계

中·日 전략대화, 북핵문제 논의(6/24)

- 중국과 일본이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일 전략대화를 열어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와 양국 관심사를 논의함.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일 전략대화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막했다"면서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수석 부부장과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회담에 돌입했다"고 보도함.
- 왕 부부장은 개막발언에서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야부나카 차관도 "양국 전략대화는 10회째를 맞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회담이 더욱 큰 의미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야부나카 차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함.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부나카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갈등을 빚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함. 신화통신은 앞서 일본 대표단에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해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독자적으로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이에 대해 대화와 협상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가스전은 중국의 영해에 속해 있으므로 독자 개발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제9차 전략대화에서도 양국은 가스

전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림.

마. 일·러 관계

◎ <러-日 영토 분쟁 점입가경>(6/25)

-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를 두고 벌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기(氣) 싸움이 점입가경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이 북방 영토 관련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평화 조약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함. 이날 성명은 지난 11일 일본 중의원이 북방영토를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영토 반환과 관련한 법을 개정한 데 대한 '맞불'로 영토 분쟁에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가세하는 양상임.
- 러시아 하원은 성명에서 "일본 의회의 결정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더는 전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양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북방 영토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북방 영토에 대해서 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것임.

바. 기타

◎ <키르기스, 갑작스런 美기지 폐쇄 철회..왜?>(6/26)

- 키르기스스탄이 미국에 제공한 마나스 공군기지 폐쇄 입장을 수 개월만에 철회한 것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해빙 무드와 무관치 않아 보임.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월 미국에 마나스 공군기지 폐쇄 입장을 밝히며 오는 8월까지 기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 대테러전의 중간 거점이 필요한 미국 당국을 긴장시킴.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25일 이 기지의 연장사용 승인안을 90명 의원 가운데 75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표 차이로 승인함. 폐쇄 입장을 밝힌 지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버린 것임.
- 이 같은 수순은 키르기스 정부가 이 기지의 성격을 기존의 대테러 기지에서 '경유기지'로 재규정하고 기존 사용료의 세 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예견된 바임. 키르기스의 입장 변화는 단독 결정이라기보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전해짐.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키르기스스탄의 움직임은 당시 자국의 턱밑까지 미군이 주둔하게 된 데 대해 불편함을 느껴온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임.
- 쿠르만벡 바키에프 대통령의 폐쇄 발표 당시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그는 키르기스를 위해 20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 등 선물보따리를 풀어냄.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러시아가 이 문제를 대하는 표정은 사뭇 누그러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5일 나미비아 방문 중 키르기스의 미군기지 사용 연장 승인에 대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환영함.

- 양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줄타기에 성공한 키르기스는 연간 기지사용료를 1천740만달러에서 6천만달러로 올려 받는 한편, 5천150만달러에 이르는 마약 및 테러 대응 자금과 경제원조도 받게 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중간 거점인 마나스 공군기지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임. 지난해 17만명의 군 병력이 이곳을 거쳐 갔으며 아프간 병력 증파를 위해서도 소중한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음.

"美·中·日 '신 삼각관계' 구축하고 있다"(6/25)

-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3대 강대국이 예전과는 다른 '신 삼각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왕핑(王屛)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25일 홍콩 대공보(大公報)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일본은 미국의 명령을 더 많이 들었다"면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삼각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함. 그녀는 그러나 "일본 정계는 최근 중국 및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는 '2등변 삼각관계'를 부르짖고 있다"고 말함.
- 왕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이며 북한 핵문제로 인해 이러한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 신 삼각관계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그녀는 또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일본을 추월해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도 중국을 얕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중일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왕 연구원은 "중일관계는 발전이 없다면 곧 퇴보를 뜻한다"면서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와 전략대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함. 중국과 일본은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전략대화를 열고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와 양국 관심사를 논의함. 왕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도 국방협의회와 전략경제대화를 하는 등 최근 중미일 3국이 자주 회담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등 3대 대국들이 신 삼각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중국-태국 "아시아 공동체 건설하자"(6/24)

- 중국과 태국이 24일 베이징에서 양국 총리회담을 열고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4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총리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25일 보도함. 원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 확대,

금융협력 강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을 촉진시키자"고 제안함.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태국의 아피싯 총리도 "태국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전면적인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안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해 원 총리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함. 원 총리는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윈난(雲南)성 쿤밍(昆明)과 태국 수도 방콕을 잇는 고속도로 전 노선을 조속히 개통시키고 메콩강 경제권의 물류와 무역협력을 강화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함.

러'-이집트,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6/24)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23일 카이로에서 10년 동안의 전략적 협력관계 협정을 체결함. 두 정상은 이날 공동 선언식에서 양국은 중동평화 등 대외적인 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에너지, 무역, 투자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들 정상은 또 양국이 새로운 다국적 세계 질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런 질서가 모든 국가에 훨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하다고 덧붙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번 이집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카이로 대학에서 미국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연설을 한 지 3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련된 것임.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에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지배력이 확대되기 전까지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음. 메드베데프와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했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중동평화의 달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올해 안에 모스크바에서 중동평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전달함. 미국, 유엔, 유럽연합(EU)과 함께 '중동평화 4자 회담'에 참여하는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자 회담국 중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강경 정파 하마스와도 대화하는 국가임.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 중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틀간의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나이지리아와 나미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3국을 순방할 예정임.

韓-印 외무장관 뉴델리서 회담(6/23)

- 한국과 인도는 23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 추진과 통상 관련 법률적 제도 정비를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 등에 합의함.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하이데라바

드 하우스에서 소마나할리 말라이아 크리시나 인도 외무장관과 만나 정치, 경제, 통상, 문화, 영사 등 제반분야의 현안에 대해 협의함. 유 장관은 회담 후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설명하고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함.

- 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적절한 시기에 교환 방문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 등 다자간 협상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국 간 무역 진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함. 이를 위해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해운 및 항공협정 체결, 현지 한국기업 진출을 위한 사회보장 협정 등 통상 관련 제도 마련 또는 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연내에 개최키로 합의함.
- 또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인도의 국내 정치 및 법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 및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요구함. 유 장관은 "CEPA 서명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한 달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도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법률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포스코 프로젝트 역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함. 회담에 앞서 유 장관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예방했고 아난드 샤르마 통상산업부 장관도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저녁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24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